

‘환경마크협회’,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 개편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 하는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작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으로 환경마크 인증업무 등 친환경상품 보급·확산에 앞장서 온 환경마크협회는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 확대·개편될 것으로 알려졌다.

친환경상품진흥원은 기존의 환경마크 인증업무 외에 친환경상품 정보제공 및 친환경상품 평가, 교육·홍보업무 등 환경친화적 생산·소비사회를 구현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환경마크협회는 지난 1994년 설립 이후 산업계의 친환경상품 개발기법 지원, 소비자의 친환경상품 소비교육, 국내 친환경상품의 수출촉진을 위한 일본·호주 등 외국과의 상호인정협정, 선진국의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정보망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과 국민들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관심증대에 따라 '04년 말 현재 총 445개 업체 1,536개 상품이 인증을 받는 등 '03년 대비 각각 45%, 103%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마크협회 이상은 회장은 “친환경상품법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액은 2003년 2천 6백 억원에서 2008년에는 1조 8천억원 이상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의 조달청을 이용('03.6~'04.8)한 환경마크상품 구매액은 941억원으로서 친환경상품법이 본격 시행될 금년 하반기부터 조달청을 통한 환경마크상품 구매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환경마크협회는 조달청과 함께 공공기관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환경마크상품의 조달청 등록을 적극 유도하고,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 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환경마크협회는 일반 소비자에게도 친환경상품

을 홍보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전시회('05.11월)” 개최를 준비하는 등 친환경상품 보급촉진을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민간투자사업도 사전환경성 검토

정부가 고시하는 국책사업에 의무화한 사전환경성 검토가 오는 7월부터는 민간이 제안하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던 민간제안 SOC사업에도 이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제안으로 추진될 고속도로, 환경기초시설, 항만 등은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을 때 환경성 검토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한해 30 여건의 민간투자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환경부는 건교부가 지난 17일 관리지역 안에서 1만㎡ 미만의 공장건설을 제한적으로 허가한다는 내용의 관련법률안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전에 사전환경성검토를 의무화해 난개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과 중부권의 광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자연보전권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안에서는 공장신설을 금지하고, 공장신설이 허용되는 지역이라도 폐수배출허용기준은 청정지역 수준(BOD 30mg/L, COD 40mg/L, SS 30mg/L이하)으로 강화해 농수로나 소하천의 오염을 방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수돗물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

앞으로는 가정 내 수도시설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념이 도입되고 수질검사 절차나 결과 등도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안전한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 제도개선, 정보공개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도물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수도물의 생산에서부터 가정에 공급되는 순간까지 전반에 걸쳐 수질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환경부는 우선 가정 안에 들어오는 옥내급수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옥내급수관은 부식이 잘되는 아연도강관의 비중이 50% 이상이고 이들은 대부분 건축물에 사용이 금지되기 전인 지난 94년 4월 이전 건축물에 사용된 것들로 노후한 문제까지 겹쳐 녹물이 나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0년 이상 된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의 수도관은 주기적으로 세척하도록 하고, 수도사업자가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급수장치와 수질을 검사해 수질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때 급수관을 세척하라는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노후한 옥내급수관을 세척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초소형 로봇 등을 활용한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부식억제를 위해 관에 부착하는 장치 등에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저수조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대형저수조는 청소 후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을 포함한 위생점검을 받아야 하며, 소형저수조는 구조 및 재질기준과 청소 등에 관한 내용을 지자체 조례로 정해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정수장에서 생산된 깨끗한 수도물이 가정까지 그대로 운반될 수 있도록 노후수도관을 개량하고, 신설되거나 개량된 상수도관망은 모니터링을 위해 일정간격마다 점검구를 의무 설치하는 한편, 정수장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수도사업자는 상수원 및 오염의 정보, 수질정보 등을 담은 '수도물 품질보고서'를 해마다 작성해 공개하는 이른바 '수도물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수도물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

이 대책이 반영된 수도법 개정안은 올 8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올해 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작년 우리나라에 내린 비는 약 산성비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전국 31개 습성강하물 측정지점에서 강우시료를 채취하여 pH, 전기전도도 및 이온성분 등 화학적 특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오고 있다.

'04년(1월~10월) 조사결과 평균 pH는 약 산성인 4.8로, '03년의 pH 4.9와 비슷한 수준이고 '99~'02년의 pH 5.0~5.1 보다는 다소 낮은 값을 보였다.

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중국, 일본을 비롯한 9개국의 pH 범위는 4.5~5.8('03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국가의 중간 정도 pH 값에 해당된다.

전국 주요 도시의 pH는 4.3~5.3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대도시의 경우 서울 4.6, 인천 4.6, 대전 4.8, 광주 5.2, 부산 5.0, 대구 5.3으로 나타나 인천과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봄철에 pH가 높은 강수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매년 봄철에 발생하는 황사현상에 의한 것으로 알카리성의 토양입자가 강수에 유입되어 강수의 화학적 조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겨울철에 pH가 비교적 낮은 강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겨울철에 난방을 위한 화석연료의 사용 등 강수의 산성도를 증가시키는 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강수중 주요 산성 원인물질로 알려진 SO_4^{2-} , NO_3^- 이온성분의 농도 및 습성침적량은 서울,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SO_4^{2-} 의 농도는 3.09mg/l로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제주지역 2.12mg/l에 비하여 1.5배 정도 높았다.

올해 '환경서비스 산업' 유망

올해 환경분야에서 떠오르는 이슈는 과연 어떤게 있을까. 우선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률안들을 통해 웰빙 및 친

환경 열풍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이러한 친환경정책이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환경실천연합회가 환경, 법학, 경제전문가 10명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2005년도 5대 환경분야 전망'을 선정한 결과 ▲환경건설탕업 등록제로 환경서비스 산업 발전 ▲친환경상품 대중화 ▲저공해 승용차 판매 및 구매 증대 ▲친환경 휴대폰 개발 및 출시 ▲실내공기질 향상 등이 꼽혔다.

특히 선정위원단은 지난해 '환경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확정에 따라 올해안으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계획인만큼 환경서비스 산업발전을 전망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공공기관의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친환경상품이 보다 대중화, 일반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선정위원장을 맡은 경기대 강신일 교수는 "환경문제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기존의 편견과 달리, 올해에는 오히려 바람직한 환경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선정위원으로 참여한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방법 다양화

사료화와 퇴비화에 집중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방법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윤중수 환경부 폐기물자원국장은 지난 10일 "사료화, 퇴비화 중심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다양화하기 위해 지렁이나 생물학적 처리, 버섯재배, 바이오 매스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을 동물의 취식가능 여부에 맞춘 것은 사료화 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 "요즘 퇴비화시설이 늘고 있어 각각 반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음식물쓰레기 건조압축기 설치 활성화를 위한

국고보조 가능성과 관련해 "일본은 국고로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거액의 예산이 필요한 데다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렁이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현재 경남 남해, 경기도 여주 등에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울산 북구도 유사한 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생활쓰레기를 자동 감람하는 생물학적 처리시설은 한때 경남 남해에 설치됐다가 부속토를 퇴비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 등의 문제 때문에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버섯재배시설은 에버랜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다.

온실가스감축 자율행동계획 추진

산업계는 오는 16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계 자율행동 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환경부,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등과 공동으로 개최한 '기후변화 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 세미나'를 열고 각 업종 단체와 공동으로 산업별 감축목표를 담은 자율행동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명관(玄明官) 전경련 부회장은 이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대내외 이미지 개선은 물론 '지속가능한 경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별로 환경 폐기물 및 온실가스 등의 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제3자 평가를 통해 매년 달성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경련은 오는 23일 열리는 전경련 총회에서 구체적인 산업계 자율행동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 부회장은 또 "산업계의 자율행동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뿐 아니라 정부 및 비정부기구(NGO)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

서 “정부 재정 및 기술개발 지원과 경제적 인센티브 강화 등 정부의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SK㈜ LG화학 포스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의 환경문제 담당자들이 참여해 각 기업이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진행해 온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소개했다.

상수도 관로에서 수력발전

수도관로의 잉여압력을 이용한 소수력 발전이 첫선을 보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6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정수장 수도관로 유입부에 발전용량 340kW급의 소수력발전소를 준공하고 상업발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관로 소수력발전소는 팔당취수장에서 성남정수장으로 수도물을 보낼 때 필요한 압력 중 남는 압력(2~2.5 kgf/cm²)을 이용해 발전 터빈을 돌리는 방식으로 공해가 전혀없는 게 특징이다.

연간 발전용량은 2천600MWh로 2억여원의 순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수자원공사는 보고 있다.

정형태 수자원공사 수도시설처장은 “앞으로 국내 수도설비나 관로시설 등에 많이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종 환경규제나 고유가 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용자규모 700억원으로 증액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이치범)는 국내 재활용업체의 창업 및 설비투자를 유도하여 재활용산업 활성화 및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시키고자 2005. 1. 3일부터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용자규모를 연간 6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100억원 증액한다.

지난해 국내·외 경제불안 및 경기침체로 자금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용자전액이 조기 대여되어 재활용업체의 시설투자 및 원료구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용자금액을 증액하게 되었다.

용자규모 증액으로 재활용업체 확장 및 창업이 활성화 되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정착을 촉진하고 침체된 국내 경기의 활성화에도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용자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를 위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재활용업체의 애로사항을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화 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인운하 살바싸움

92년부터 추진되다 지난해 “원점 재검토”로 결론이 난 경인운하 공사를 둘러싸고 건교부와 환경부가 다시 “살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건교부의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변경신청”에 대해 “92년 협의된 내용대로 추진하되 올해말에 경인운하 재검토 용역이 끝난 뒤에 다시 논의하자”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은 인천시 서구 시천동과 계양구 굴현동 사이 길이 14.2km의 굴포천 방수로(放水路) 확장 공사이다.

홍수 때 인천 북부 지역 빗물을 서해로 내보내기 위해 지난해 6월 너비 20m로 만든 임시 방수로를 너비 80m로 넓히는 공사다.

환경부는 주민들의 홍수 피해에 대한 우려를 감안할 때 방수로 확장 공사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방수로 확장 공사가 언제든지 경인운하 건설 공사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현재 계획된 굴포천 방수로를 다시 너비 100m로 넓히고 굴현동~김포대교 구간 4km 가량만 더 수로를 건설하면 애초 경인운하 계획과 비슷해진다. 